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3
----------	-----

발의연월일 : 2020. 6. 18.

발 의 자 : 어기구 · 유동수 · 문진석
서영석 · 주철현 · 김주영
박영순 · 박 정 · 서동용
김상희 · 노웅래 · 정일영
박재호 · 윤준병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이하 “리쇼어링”이라 함)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도 개정에서 리쇼어링 시 조세감면·자금지원·입지지원·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선정요건의 엄격성, 대상업종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의 리쇼어링 확산에 여전히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이에 일부 규정의 개정을 통해 리쇼어링을 활성화시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해외진출기업”의 요건에 ‘2년 이상 계속’ 요건을 삭제하고, 제조업·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이외에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에 대비하여 방역이나 면역 관련 분야 등도 업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국내복귀”의 개념에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 요건을 삭제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생산제품의 국내생산을 위한 사업장 신설·증설 이외에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조달하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아웃소싱)도 포함시킴(안 제2조제3호).

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규모를 총 15명 이내에서 총 2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6조제3항).

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및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리쇼어링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바, 해외사업장 축소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안 제7조제1항).

마.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안전산업 분야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의2 신설).

바. 동반리쇼어링 요건과 관련한 ‘업종 연관성’ 및 ‘사업장 인접성’ 요건을 삭제하고, ‘시간적 인접성’을 추가하여 동반리쇼어링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호).

사. 동반리쇼어링 이외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반 복귀기업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계망을 갖춘 대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시켜 효과를 극대화함(안 제16조의2 신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정보통신업 및 「산업발전법」”을 “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으로, “지식서비스산업을”을 “지식서비스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으로,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해외진출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
- 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조달하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

제6조제3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업이 아닐”을 “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자금지원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안전산업 분야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내에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사업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조성할 것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 일반 복귀기업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해외진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정보통신업 및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하고 있을 것	나. ----- ----- ----- 「통계법」 ----- ----- ----- 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 ----- ----- 지식서비스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	3.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 ----- -----

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4. (생 략)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생 략)

-----말한
다.

가. 해외진출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

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조달하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

4. (현행과 같음)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20명-----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2.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

3.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

1. -----

-----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

할-----

<삭제>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자금지원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안전산업

분야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

<p>제16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국내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국내에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사업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을 것</u></p> <p>② ~ ④ (생략)</p> <p><u><신설></u></p>	<p><u>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u></p> <p>제16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p> <p>-----</p> <p>-----</p> <p>-----</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국내에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사업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조성할 것</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의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 일반 복귀기업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u></p>
--	--